

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착수

☐ 과거 성공적인 탄소시장으로 평가받아온 유럽의 ETS는 2005년 이후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,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와 정국경색 등으로 인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기 또는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

☐ 반면, 기후변화그룹(Climate Group)에 따르면, 최근 아시아-태평양 지역이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, 인도부터 호주까지 다양한 유형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개발되고 있음

☐ 그러나, 이와 같은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활성화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됨

☐ **유럽의 ETS(Europe's Emissions Trading Scheme)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,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와 정국경색 등으로 인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기 또는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**

— 유럽의 ETS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거대한 탄소시장(carbon market)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세를 지속해오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었으나,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

— 한편,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공화당의 반대와 차기대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정국경색 영향으로 인해 향후 전망들이 불투명한 실정임

- 미국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상당수 있으며, 이중 캘리포니아의 신설 제도인 RGGI(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)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음
- 그러나, 현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 메커니즘(cap and trade mechanisms)을 반대한 공화당 입법권자의 법적인 이의 제기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있음

☐ **반면, 기후변화그룹(Climate Group)에 따르면, 최근 아시아-태평양 지역이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인도부터 호주까지 다양한 유형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개발되고 있음**

— 현 호주정부는 전임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 계획안을 수정하였으며, 이 계획안이 호주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,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탄소 정찰제(a fixed carbon price)를 시행할 예정임

— 2010년부터 시행된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거래제는 운용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적절한 시기에 뉴질랜드는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할 계획을 모색 중에 있음



— 한국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의 시장형성에 합의하였으며, 대만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, 일본은 3월 대지진 및 쓰나미(sunami)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한국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, 이의 여파로 인해 현재 모든 계획이 보류중인 상황임

— 인도는 개발도상국들의 의무적인 탄소감축 목표 적용을 맹렬히 비난해온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, 탄소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음

—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(12th Five-Year Plan)의 마지막해인 2015년에 전국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대다수 국가들과는 상이하게 탄소배출권거래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

  • 국가개발개혁위원회(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)에 따르면, 중국은 2013년까지 6개의 시험용 탄소배출권제도를 운용할 계획임

□ **그러나, 이와 같은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활성화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**

—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, 각국마다 분명한 입장차이도 나타나고 있음

  • 호주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, 한국과 일본의 재벌(business group)은 그들의 탄소배출권 계획을 201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데 성공함

  • 특히, 중국은 가격결정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우려하여 다른 국가들과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됨

—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열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을 고양시키는 동안, 미국의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기피는 이웃국가인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음

  •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더라도, 미국의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, 미국은 여전히 독자적인 탄소배출거래제를 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— 국제배출권거래협회인 IETA(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)에 따르면,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의 수용여부에 둘러싸여 있으며,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상당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

  • Ernst & Young에 따르면,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가격 설정에 관한 다국적이고 국제적인 논의는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  • UN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 1차 의무공약기간(first Kyoto commitment period)과 차기 협정과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됨

선임연구원 박태준